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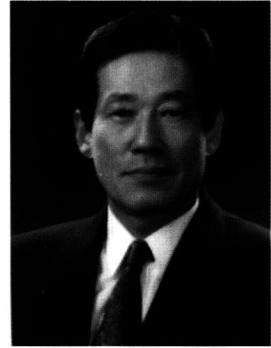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야 한다

발 달된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사는 우리 현대인들은 그 혜택 못지 않게 그것으로부터 야기되는 위험에도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다. 지난 8월 6일 발생한 꿈에서의 KAL기 추락참사는 현대 첨단기술의 집약으로 단시간 내에 대륙간의 이동을 가능케 해주는 항공의 이기가 반대급부로 인류에게 엄청난 상처를 안겨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6,70년대에 수출 제일주의를 표방하며 연평균 약 10%의 높은 경제성장률로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였지만, 반면에 그 시대 상황에 따라 안전분야에 극히 소홀했던 게 사실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부작용이 차츰 화재, 붕괴, 가스폭발, 추락 등의 대형사고로 나타나고 있다. 그 중 화재사고는 우리 주변에서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사고이며 보다 과학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분야로서, 지난 한 해만도 총 28,665건이 발생하여 2,223명의 인명피해와 1,131억원의 재산피해를 입혔다.

이렇게 잇달은 대형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개선되지 않은 안전불감증과 허술한 방재체계를 들 수 있다. 국민의식 속의 안전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상태에서 대형사고는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우리는 우리나라가 이미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말한다. 1인당 GNP가 일만불을 훌쩍 넘어섰으며 선진대국의 상징인 OECD가입도 세계에서 26번째로 끝낸 상태이다. 하지만 연이어 터지는 대형사고가 입증해주듯이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은 아직도 후진대열에서 있음이 틀림없다. 지금부터라도 진정한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선진민족이 되기위해 안전불감증에서 속히 벗어나야 한다.

한편 안전불감증 못지않게 우리가 관심을 두고 개선해야 할 부분은 국내 방재시스템의 경직성이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방재시스템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운영해 왔으



정대춘 / 방재시험연구소장

며, 주로 보험회사가 중심이 되어 민간 자율방재를 추구하는 구미체계와는 상이하다. 근본적으로 정부위주의 방재체계는 손익의 주체가 되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효율적인 방재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힘들다. 또한 오늘날의 안전분야는 복잡, 전문화 되어 있어 국가는 선도적으로 이끌기 보다는 전문가들이 해당분야 발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게 바람직하다.

또 하나 이 지면을 통해 강조하고 싶은게 있다면 그것은 안전에도 절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동안 우리 기업의 풍토에서 안전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사고가 나지 않으면 낭비에 불과하다며 주로 비생산적인 측면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미래 예측이 어려운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안전이 최고의 상품이 될 수밖에 없다. 고객이 구매의 선결조건으로 안전성을 요구하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안전만족도의 극대화를 위한 기술개발, 교육, 품질관리에의 절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져 우리의 상품과 서비스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

바야흐로 작금의 세계는 WTO체제하에서 무한 경쟁의 시대에 돌입하게 되었으며, 그러한 세계속에 살아남기 위해선 하루빨리 안전분야도 '세계화'를 이룩해야한다. 세계화는 단순히 외국의 문화를 익히고 외국어에 능통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독창적인 것으로 이룰수 있다는 것을 잊지말아야겠다. 이제 가시화되는 개방화 시대에 걸맞고 과학적이고 실험적인 것이 바탕이 되는 국내 안전분야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때 우리나라 산업은 안전의 초석위에 튼튼한 발전과 성장을 계속하리라 믿는다. 